

일본총리, 세제·사회보장개혁 및 TPP 등 주요 정책의 연기 표명

3월 29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민주당 정권의 핵심 정책인 세제·사회보장의 일체개혁, 환태평양파트너십(TPP) 협상 참가 등에 대한 결정 시한의 연기 의사를 표명. 이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상정책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그동안 한일FTA 논의 재개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정부의 입장변화 여부에 주의할 필요

-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3월 29일 참의원(상원) 예산심의회에서 세제와 사회보장의 일체개혁, 환태평양파트너십(TPP) 협상 참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시한(6월)에 대해 연기할 의사를 표명
 - ‘세제와 사회보장의 일체개혁’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의 재구축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것으로, 핵심은 연금개혁과 소비세율인상에 있음. 사회보장개혁검토본부(위원장 간 총리)는 6월까지 이를 법안화할 예정이었음.
 - ‘환태평양파트너십(TPP)’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작년 11월 「포괄적 EPA 기본방침」을 발표하면서 금년 6월까지 그 참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음.
 - TPP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브루나이가 2006년에 발효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현재는 미국·호주·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가 추가되어 협상을 진행중임.

- 이외에 TPP 참가와 맞물려 있는 ‘농업개혁’ 및 일본경제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주요 정책도 함께 연기될 것으로 예상
- 민주당 정권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정책의 결정 시기를 연기하고, 금번 대지진 및 원전사고에의 긴급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
 - 아울러, 금번 지진피해 지역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인바, 농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TPP를 서두르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측면도 정책연기의 배경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핵심정책의 연기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상정책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세제와 사회보장 일체개혁의 연기는 일본의 재정운영 목표(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자칫 장기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음.
 - TPP에 대한 참가표명의 지체는 TPP와 맞물린 비관세장벽의 개선과 인적 이동의 자유화도 진척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그동안 한일 FTA 논의 재개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3/29 夕刊, 3/30 朝刊)